

## 북한의 ‘제주4·3사건’ 인식\*

朴贊殖\*\*

1. 머리말
2. 4·3사건의 배경과 발발 원인
3. 4·3사건의 전개과정
4. 4·3사건의 성격과 의의
5. 맺음말

### 1. 머리말

제주4·3사건은 미군정시기에 발발하여 대한민국 수립과 분단체제 고착상을 거치면서 전개되어 갔다. 그 주도세력이 남한의 5·10 단독선거 반대를 명분으로 무장투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북한정권에서도 주목한 사건이었다. 또한 사건의 전개과정에서 지도부 일부가 1948년 8월 해주 인민대표자대회에 참석하면서 북한정권 수립에 가담했기 때문에 북한에서 4·3사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6·25 한국전쟁 이후 분단체제가 고착화되면서 북한정권은 해방 공간에서 벌어진 남한의 통일운동에 대한 대표적 사례로서 제주4·3사건을 평가하여 왔다.

그러나 4·3사건에 대해 북한정권은 그 지도부가 남로당과 연결되어 모험적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수많은 인민들이 희생되었다는 점을 들어 남로당의 오

---

\* 이 논문은 2003년도 국사편찬위원회 남북역사학 기초조사연구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제주대학교 강사

류로 평가, 남로당을 숙청하는 명분으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그러면서도 줄곧 지도부와 분리하여 제주도 인민들의 영웅적 투쟁이었다고 평가하여 왔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4·3사건에 대한 북한의 인식이 어떠했으며, 이러한 인식이 어떤 시대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지를 좀더 심층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검토의 대상은 사건의 배경과 전개과정, 사건의 의의와 성격 등에 대한 북한의 인식이 될 것이다. 또한 북한의 4·3사건 인식이 시기적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두고자 한다.<sup>1)</sup>

이렇게 북한의 4·3사건 인식의 시기적 변천을 검토하는 것은 북한정권의 남로당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남한에서의 통일운동과 민중운동에 대한 인식을 함께 살피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4·3특별법에 의해 대한민국 정부의 진상조사보고서가 발간된<sup>2)</sup> 이후 4·3사건의 역사적 진실에 대한 남북한의 상호 시각 차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sup>3)</sup>

- 1) 본 연구에서 '제주4·3사건'이라고 지칭한 것은 나름의 입장이나 견해를 담은 표현이 아니다. 이 글에서 '사건'이라 함은 '단순히 일어난 사소한 우발적인 일 또는 문제가 되거나 관심을 끌 만한 일'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과거 있었던 특정한 일'을 가리키는 일반적 개념으로 사용했음을 밝혀둔다. 현재 이 사건에 대한 正名 부여는 앞으로 심층적인 연구 결과를 거쳐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총체적인 연구를 진행하지 못한 필자에게도 부여된 향후 과제이다. 한편 '제주4·3사건진상조사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에 의거해 작성된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전문가들이 역사적 성격 규정을 유보한 채 '제주4·3사건'이라고 명명한 것을 참고했음도 밝혀둔다.
- 2) 2003년 10월 15일 국무총리 소속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명예회복위원회'는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이하 『진상조사보고서』로 줄임)를 확정 채택하였다. 이어서 10월 31일 노무현 대통령은 과거 국가권력의 잘못에 대해 유족과 제주도민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4·3사건이 발발한 지 55년 만에 비로소 '국가공권력에 의한 대규모 민간인 희생' 사실을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하게 된 것이다. 이번 『진상조사보고서』는 4·3사건을 "제주도에서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남로당 제주도당의 무장봉기, 그리고 1954년 9월 21일까지 있었던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무고하게 희생된 사건"으로 규정하였다.
- 3) 남한학계에서 4·3사건을 다룬 논문은 많지 않을 뿐 아니라, 연구자의 개인적 입장에 따라 그 평가가 달라지고 있다. 연구자의 시각에 따라 남로당의 무모한 투쟁노선에 따른 무장폭동과 미군정의 탄압에 저항한 민중항쟁 등으로 상반된

지금까지 북한의 4·3사건 인식을 독립적으로 검토한 연구결과는 없다. 정부의 진상조사보고서에도 이에 대한 기술은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4·3사건 당시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북한측의 각종 학술지·신문·잡지 등 공식 자료에 나타난 사건 관련 논문 및 기록을 개괄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그 중에서도 4·3사건만을 집중적으로 다룬 김덕호와 박설영의 두 편의 논문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sup>4)</sup>

그밖에 이 글을 쓰면서 분석한 자료는 미국 국립문서보관소(NARA)에 소장 중인 북한노획문서, 통일부 자료실과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에 소장 중인 《로동신문》·《민주조선》·통사류 등 북한 문헌에 수록된 4·3 관련 기록들을 밝히든다.

---

성격 규정이 이루어져 왔다(양정심, 「제주4·3항쟁에 대한 연구동향」, 《역사와 현실》 27, 1998 ; 김종민, 「4·3 이후 50년」, 『제주4·3연구』, 역사비평사, 1999 ; 박찬식, 「4·3연구의 추이와 전망」, 《제주작가》 2, 실천문학사, 1999). 4·3사건이 이데올로기로 점철된 한국현대사의 민감한 주제이기는 하지만, 남로당의 무장봉기, 도민들의 항쟁, 민간인 대학살이 종합된 총체적 사건으로 보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서중석, 「제주 4·3의 역사적 의미」, 『제주4·3연구』, 역사비평사, 1999). 다소 미흡하기는 하지만 이러한 총체적 시각이 반영된 결과물이 『진상조사보고서』라고 할 수 있다. 『진상조사보고서』는 4·3위원회의 공식적인 조사와 전문가의 정리와 분석·검증을 두루 거쳐서 완성되었다. 또한 위원회는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에 대한 비판적 검토도 철저하게 수행하였다. 따라서 『진상조사보고서』는 4·3사건에 대한 진상을 담은 대한민국 정부가 공인한 역사서로 평가할 수 있겠다. 필자가 남한측의 다양한 연구 성과를 소개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고 『진상조사보고서』를 중심으로 북한측의 공식적인 견해와 대비시키려는 나름의 이유가 여기에 있음을 미리 밝혀둔다.

- 4) 이 글에서 주요 검토 대상이 된 두 논문은 아래와 같다.

김덕호, 「제주도 인민들의 4·3봉기」, 《역사과학》 1965.

박설영, 「5·10단선을 반대한 제주도인민들의 4·3봉기」, 《역사과학》 1991.

이들 논문은 4·3사건에 대해 비슷한 논지를 가지고 서술한 북한측의 공식 입장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뒤에 썩어진 박설영의 논문이 좀 더 구체적이고 다양한 연구 성과가 반영되었다는 정도의 차이점이 있다. 분야별로 내용을 달리 하는 서술의 차이점은 본문에서 따로 언급하기로 한다.

본문에서 따로 인용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북한측의 견해라고 밝힌 것은 두 논문의 요지임을 미리 밝혀둔다. 물론 두 논문의 견해가 다른 점은 구별해서 정리하였다.

## 2. 4·3사건의 배경과 발발 원인

4·3사건의 배경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의 진상조사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다

사건의 배경은 극히 복잡하고 다양한 원인이 착중되어 있어서 하나의 요인으로 설명할 수가 없다. 동북아 요충지라는 지리적 특수성이 있는 제주도는 태평양 전쟁 말기 미군의 상륙을 저지하기 위해 일본군 6만여 명이 주둔했던 전략기지로 변했고, 종전 직후에는 일본군 철수와 외지에 나가있던 제주인 6만여 명의 귀환으로 급격한 인구변동이 있었다. 광복에 대한 초기의 기대와는 달리 귀환인구의 실직난, 생필품 부족, 콜레라에 의한 수백 명의 희생, 극심한 흉년 등의 악재가 겹쳤고, 미곡정책의 실패, 일제경찰의 군정경찰로의 변신, 군정관리의 모리행위 등이 큰 사회문제로 부각됐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1947년 3·1절 발포사건이 터져 민심을 더욱 악화시켰다.<sup>5)</sup>

즉 미군정의 민심 이반, 제주도 내부의 사회경제 상황의 악화 등을 사건의 배경으로 거론하고 있다. 그러나 해방 직후 분단구조의 고착화가 제주에 미친 파장에 대해서는 그다지 큰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 전국적 보편 상황과는 달리 제주지역 상황의 특수성이 강조되는 대목이다. 예컨대, 신탁 문제를 둘러싸고도 중앙의 흐름과는 달리 제주도 좌파세력은 1년이 지난 1947년 2월에야 민전을 결성하여 뒤늦게 상부의 지시를 받고 찬탁운동에 나섰다는 것이다.<sup>6)</sup>

북한은 4·3사건의 배경을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 미국의 남한 강점과 그로 인한 제주도민들이 미국에 대한 적개심에서 찾고 있다. 이미 태평양전쟁 말기에 제주도에 대한 무차별 폭격이 가해져 무고한 인명이 사망했기 때문에 제주도민들은 미국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해방을 맞이했다는 것이다.

5) 『진상조사보고서』, 533쪽.

6) 『진상조사보고서』, 92쪽.

- 나아가 미국은 해방 후 남한을 강점한 뒤 제주도를 대만·오키나와·일본 본토와 연결시켜 아시아 침략을 위한 군사 기지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 미군은 1945년 9월 15일까 제주도를 강점해서 국방경비대·경찰대와 수많은 무장테러단을 주둔시켜 민주주의 세력을 가혹하게 탄압했다.
- 이러한 미군의 진주와 탄압에 대해 제주도민은 보안대 등 자체방위조직을 결성하여 투쟁에 나섰다. 1945년 10월초 미제와 한라단의 만행을 반대하는 강력한 시위를 단행하였고, 1946년 1월 제주버스회사 종업원 50여 명이 노동쟁의에 나섰다. 1,200명의 맹원을 망라한 교육자동맹이 양과자·양담배 배격운동을 전개하였고, 1946년 하반기에 일제식 교육잔재와 학원의 모리화, 파쇼 교육을 반대해서 동맹휴학 단행하였다. 1946년 12월 각계각층의 민주단체들을 망라한 민전 제주도위원회를 결성하고 인민정권을 수립하기 위한 투쟁에 나섰다.<sup>8)</sup>

즉 북한은 4·3사건의 배경으로서 시종일관 미군정이 제주도를 군사기지로 강점하고 식민지화하려는 데 대해 제주도민이 강력히 투쟁했던 상황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배경 설명은 단순한 논리에 그치고 있다. 해방 직후 일본군 철수와 귀환인구의 급증에 따른 사회경제적 문제의 발생, 제주도 인민위원회의 태동과 활동, 일제강점기 항일운동가들의 복귀, 친일파 미청산에 대한 도민들의 반감, 미군정 실시에 따른 제주도내 정치·사회·경제 동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해방직후 건설되었던 제주도 인민위원회 및 조선공산당(1946년 말 이후 남조선로동당)을 비롯한 좌익단체의 동향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되어 있지 않다. 그나마 민전 결성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통일전선체 운동을 중시한 견해라 할 수 있다.<sup>9)</sup>

7) 제주도에 미군정이 실시된 것은 제59군정중대가 상륙한 11월 9일부터였다(『진상조사보고서』, 80쪽).

8) 이 내용은 『제주도인민들의 4·3무장투쟁사』, 36-37쪽에서 인용했다고 하였으나, 실제로 인용서에는 1946년 2월 23일로 적혀있다(김봉현·김민주, 『제주도인민들의 4·3무장투쟁사』, 1963, 37쪽). 그러나 이것 또한 실제 사실과는 거리가 있다. 민전 제주도위원회는 1947년 2월 23일에 발족하였다(『진상조사보고서』, 94쪽).

9) 김단삼이 1948년 8월 해주 인민대표자대회에서 연설한 내용 중에는 “남조선 근로인민의 유일한 전투적 전위대·남조선노동당을 비롯한 민전 산하의 민주주

위에서 언급한 4·3사건의 배경에 뒤이어 북한이 주장하는 4·3사건의 발발 원인을 살펴보도록 하자. 북한은 4·3사건의 발발 원인으로 두 가지 계기가 되는 사건을 제시하고 있다. 하나는 1947년 3·1절 집회 발포 사건에 뒤이은 3·10 총파업을 들고 있고, 또 하나는 1948년 2·7구국투쟁을 들고 있다. 전자는 미군정의 가혹한 탄압과 관련시켜, 후자는 남한 단독선거 반대 투쟁과 관련시켜 서술하고 있다.

북한은 1947년 '3·1사건'을 '제주도 인민들의 3·1절 투쟁'이라고 명명하고 있다. 사건의 경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 3·1절 28주년 기념행사를 며칠 앞두고 제주도 인민들이 합법적으로 미군정·도청·감찰청 당국과 교섭전을 벌였다. 그러나 미군정은 이 행사를 기회로 제주도내 민주세력을 탄압하는 기회로 삼았다. 제주도민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시위와 집회를 단행하였다.
- 3월 1일 오전 8시경 오현중학교 교정에서 2,000여 명의 도민들이 집결하여 기념대회를 진행하려고 할 때 미군정 법무관 패트릿지와 1구서장이 거느린 기마대와 기동대원 수십 명이 해산을 강요했다. 강력한 항의 시위가 전개되자 미군정은 “대회를 10분간에 마쳐라”고 굴복했다. 승리한 학생과 시민들은 기념대회를 마치고 가두시위에 나섰다. 3만여 명의 군중이 북국민학교 운동장에 집결하여 ‘3·1절 28주년 기념 제주도대회’를 개최하였고, 대회가 끝난 뒤 시위에 들어갔다. 한편 관덕정 광장에서도 미제와 매국노들을 배격하는 시위가 치열하게 벌어졌다. 미군정은 인민들의 기세에 기겁하여, “발포하여도 좋다”는 지령으로 평화적 시민들에게 무차별 사격을 가하여 식산은행 앞에서 남자 어린이를 사살하고 수많은 시위군중들에게 부상을 입혔다.
- 이러한 시민 살상에 대해 3월 2일 “인민을 학살한 경찰을 총살 처단하라!”는

---

의적 애국단체들은 가장 잔악한 탄압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 인민들은 이에 단호히 반대하여 결정적으로 투쟁을 전개하였습니다”라고 하여 전위당인 남로당의 존재를 분명히 하였다(『남조선인민대표자대회 중요문헌집』, 1948. 10. 30).

또한 4·3사건 발발 1년 뒤인 1949년 4월 3일자 《로동신문》에도 “제주도 인민들은 8·15해방 직후 제주도 인민위원회를 조직하고 인민행정을 실시하였었다. 그러나 조선침략의 목적을 갖고 남반부에 진주한 미군은 제주도에서도 인민위원회를 탄압 해산하였다”고 인민위원회의 존재를 부각시켰다.

구호를 들고 제주도민들이 일어섰으며, 이어서 이러한 제주도민들의 투쟁을 계기로 총파업이 전개되었다.

북한은 제주도민의 선두에 서서 항쟁을 직접 지휘했던 김달삼의 발언을 직접 《로동신문》으로부터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소개하기도 했다.

미제국주의의 충실한 주구인 반동경찰은 1947년도에 3·1절을 경축하는 애국적 인민을 학살하고 수많은 부상자를 내었다. 이와 같은 반동경찰의 만행은 제주도 전체 인민들에게 참을 수 없는 민족적 분격을 일으키게 하였다. 제주도 인민들은 미제국주의의 비호 밑에서 강행된 이 포학에 대하여 일대 파업으로 항거하였다. 즉 3월 10일에 단행된 총파업에는 공장, 농촌, 학교 등에서 광범한 대중이 참가하였다. 노동자들은 기계를 멈추고 농민은 세금 징수에 불응하고 학생들은 일제히 맹휴를 단행하고 미군정 절대 반대를 외치며 투쟁하였다. 이 3·10파업은 남조선 전역에 걸쳐 단행된 3월 20일 총파업의 단서가 되었다.<sup>10)</sup>

북한은 이 총파업을 거대한 규모의 대중투쟁으로서 제주도인민투쟁사에 커다란 흔적을 남긴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3·1사건의 영향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 총파업은 제주도민들을 불굴의 투쟁 정신으로 무장시켰으며, 앞으로의 투쟁을 고무하였다. 그러나 총파업에 대한 미군정의 무력적 탄압이 이루어져, 3·1절 시위와 총파업 후 불과 한 달도 못되는 기간에 2,000여 명이 체포되었고,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군정재판에 회부되어 사형에 처해졌다.
- 이러한 검거와 학살에 대해 제주도민들은 발전적인 투쟁을 전개하였다. 3월 15일 중문면 노동자 300여 명이 지서에서 결사시위 투쟁을, 6월 6일 종달리 군중대회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을 벌였다. 8·15 2주년을 맞아 제주도내 곳곳에서 기념 투쟁이 전개되었다.

이상이 북한이 설명하고 있는 4·3사건 발발 원인 중 하나인 3·1사건에 대

10) 《로동신문》 1948년 8월 22일자.

한 개요이다. 북한의 주장대로라면 3·1사건이 4·3사건으로 가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크게 보아 3·10 총파업의 구체적인 실상이 서술되지 않았으며, 총파업에 대한 미군정의 대응이 어떠했는지 구체적이지 않다. 미군정의 탄압 이후 남로당의 동향에 대해서도 알 길이 없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많은 오류가 확인된다. 3월 1일 당일 경찰의 발포로 구경하던 주민 6명이 사망한 상황을 마치 강력한 시위에 대한 미군정의 의도적인 발포 명령으로 보는 데 대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3월 한 달 사이에 2,000여 명이 체포되었다는 것도, 실제 500여 명과는 거리가 있다. 또한 군정재판에 회부되어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 미군정의 '학살'이란 표현은 당시 상황과는 맞지 않는다. 게다가 3·1사건 후 1947년 상황이 너무 소략하게 다루어진 점도 지적된다. "탄압이면 결사항쟁이다"라는 무장봉기의 절대명분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미군정의 탄압이 구체적으로 서술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4·3사건 발발 계기가 되었던 또 하나의 사건으로 '2·7투쟁'을 거론했다. 2·7투쟁에 대한 북한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 남한만의 단독선거를 실시하기 위한 절차로서 「유엔임시조선위원단」이 입국한 것에 대한 거부로서 2·7투쟁은 일어났다. 특히 제주도민들은 당과 수령의 호소를 받들고 「유엔조선위원단」의 입국을 단호히 반대 배경하는 2·7투쟁에 나섰다.
- 2·7구국투쟁은 제주도 인민들의 반미투쟁에서 폭동으로 이행하는 전환기였으며, 대중적인 무장폭동이였다. 즉 4·3무장봉기를 준비하는 직접적인 시발점이었다. 전도적으로 대중적인 시위와 군중대회가 단행되었으며, 반동적 인사들의 거점을 습격하였다. 밤에는 한라산을 비롯한 300여 개의 봉우리와 계곡에서 횃불투쟁과 합성시위가 전개되었다.
- 이러한 투쟁의 연장선상에서 1948년 2월 중순 안되면 사제리 인민들의 투쟁, 2월 13일 한림면 금악리 청년들의 투쟁이 있었고, 3월 중순경에 각 구, 면, 리 단위로 인민무장자위대가 조직되어 지구별로 유격근거지가 설치되었다. 이러한 투쟁 과정에서 그 뒤 보다 보다 높은 단계의 투쟁, 즉 5·10단선을 철저히 파탄시키기 위한 대중적인 무장봉기인 4·3봉기로 이행할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이 북한이 설명하는 2·7투쟁이 4·3사건 발발 직전에 제주도에서도 전개된 것은 분명하다.<sup>11)</sup> 그러나 대중적인 무장폭동으로 전개된 것은 아니며, 군중대회가 열렸다는 증거는 아직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2·7투쟁은 남로당이 남한만의 단독선거를 저지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총파업을 일으키며 강력히 대응한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북로)당과 수령의 호소를 받들어 제주도민들이 투쟁에 나섰다는 것은 당시 상황에 비추어볼 때 전혀 설득력이 없는 내용이다. 남로당 제주도당이 자체적으로 무장봉기를 준비·결행했다는 사실은 철저히 숨겨져 있다. 또한 2·7투쟁을 전후해 적극적인 투쟁 분위기만 강조했지, 탄압으로 인한 최악의 위기상황에 대한 고려가 엿보이지 않는다. 1948년 3월 세 차례 연속으로 일어난 김용철·양은하·박행구 등의 고문치사 사건<sup>12)</sup>은 언급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설명과는 달리 남로당 계열 인물들은 4·3의 직접 발발 원인을 ‘극도의 탄압에 대한 저항’으로 인식하고 있다. 우선 제주도 인민유격대 지휘자였던 감달삼은 해주 인민대표자 대회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드디어 제주도 인민들은 지난 2월 7일을 기하여 남조선 전지역에 걸쳐서 소미(蘇美)양군의 즉시 동시철폐, 유엔위원단의 퇴거, 단선반대 등의 표어를 내걸고 일어난 2·7총파업투쟁에 호응하여 용감히 일어섰으며 이 투쟁에서 제주도 4만 농민들은 시위로써 인민항쟁의 막을 열어놓았습니다.

이같은 제주도 인민의 정당하고도 평화적인 항거에 놀란 미제국주의의 그 주구 반동경찰은 그 탄압정책을 더욱 잔인한 학살정책으로 강화시켰습니다. 남로당을 비롯한 민전 산하의 민주주의적 애국단체에 대한 폭압은 더욱 악랄화해졌으며 민주주의 애국자와 일반 인민들에 대한 살인 방화 강도 파괴는 공공연히 자행되었습니다.(중략)

이와 같은 미제국주의의 직접 지휘로 되는 전고미문의 야만적인 테러와 학살, 그리고 파괴 약탈 속에서 신음하여 오던 제주도 인민들에게 미국인들과 그 주구들이 조국의 분할을 공고화하고 남조선을 완전히 미국의 식민지로 만들려는 단독

11) 『진상조사보고서』, 148쪽.

12) 『진상조사보고서』 149-152쪽.

선거 실시가 발표되자 인민들의 적에 대한 분노와 증오가 어찌 폭발되지 않았습니까. 이에 조국의 통일과 독립을 위하여 단호히 일어서라고 부르짖으면서 제주도 인민들은 자연발생적으로 총궐기하였습니다. 이것이 제주도 4·3인민항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었던 원인이며 이것이 제주도 인민군 즉 ‘산사람’들이 생기게 된 원인인 것입니다.<sup>13)</sup>

또한 남로당 중앙당 간부를 지냈던 강문석은 『로동신문』에 다음과 같이 발발 원인을 설명하고 있다.

2·7구국투쟁을 전후하여 제주도에서만 무려 1만여 명이 검거되었으며 김용철 양운하 등 열렬한 애국청년들이 계속 학살되었다.

반도의 학살적 조건하에서 인민들이 무장반격으로 진출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남조선 인민들의 무장봉기의 맹아는 이미 10월 인민항쟁에 싹트었으며 2·7구국투쟁에서는 각지에서 초보적인 형태가 나타나 있었다.

“또다시 망국노예가 되느냐” “일어서서 원수와 싸워 이기느냐”의 두 길만이 놓여 있는 긴박한 정세하에서 영웅적 제주도 인민들은 용감하게 후자의 길을 택하여 일어났다.<sup>14)</sup>

두 사람 모두 2·7투쟁을 전후하여 심각한 탄압에 직면한 남로당 및 제주도 민들이 불가피하게 무장봉기를 결행하게 되었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때마침 발표된 남한만의 단독선거 방침은 조국의 통일과 독립을 위해 일어섰다는 무장봉기의 명분으로 작용했다. 특히 무장투쟁이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났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북한 정권 또는 남로당 중앙당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의혹을 불식시키려 하였음을 알 수 있다.<sup>15)</sup> 북한도 무장봉기가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났다는 데에는 동의하고 있다. 김덕호는 “제주도 인민들의 철저한 자주적인 원칙에 의해 전개되었고, 제주도 인민들은 적의 대무력과 상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육지와 떨어진 섬에서 그 어떤 외부적인 원조의 힘을 바

13) 『남조선인민대표자대회 증요문헌집』, 1948. 10. 30.

14) 《로동신문》 1950년 4월 3일자.

15) 이 문제는 『진상조사보고서』에서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162-165쪽).

란 것이 아니라 자체로 인민유격대를 조직하였으며 유격 근거지를 설치하고 투쟁에 필요한 모든 것을 자체로 해결하였다”고 강조하였다.<sup>16)</sup> 박설영 또한 그의 글 결론에서 4·3사건의 성격을 언급하면서, “제주도 인민들이 자주적 원칙에 철저히 서서 자체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면서 투쟁을 성과적으로 벌려나갔다. 육지와 떨어진 외진 섬에서 그 어떤 외부의 지원도 바라지 않고 자체의 힘으로 항쟁을 조직하고 투쟁방법을 택하여 싸움을 벌렸다. 자체로 인민유격대를 조직하고 유격근거지를 설치하였으며 투쟁에 필요한 모든 것을 자기 힘으로 해결하였다. 인민들은 적들의 무기를 빼앗아 자체를 무장하고 점차 장비를 강화하여 적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고 같은 논조로 항쟁의 자주성을 역설하였다.<sup>17)</sup>

### 3. 4·3사건의 전개과정

1948년 4월 3일 발발한 무장봉기는 이후 1950년에 이르기까지 3년여에 걸쳐 전개되었다. 남한측의 ‘4·3특별법’에 의하면, 4·3사건이 전개된 기간을 1948년 4월 3일로부터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령 해제 때까지 잡고 있다. 이에 따라서 『진상조사보고서』는 전개과정을 다음과 같이 크게 다섯 시기로 나누고 있다.

- 무장봉기와 5·10선거(1948. 4. 3~1948. 5. 10)
- 초기 무력충돌기(1948. 5. 11~1948. 10. 10)
- 주민 집단희생기(1948. 10. 11~1949. 3. 1)
- 사태 평정기(1949. 3. 2~1950. 6. 24)
- 사건 종결기(1950. 6. 25~1954. 9. 21)

즉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의 봉기, 무장대와 토벌대의 충돌, 토벌대의 진

16) 김덕호, 「제주도 인민들의 4·3봉기」, 30쪽.

17) 박설영, 「5·10선거를 반대한 제주도인민들의 4·3봉기」, 169쪽.

압에 따른 주민희생, 사태 평정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적절하게 시기순으로 정리해 놓았다. 대체로 토벌대와 무장대의 상호 역학관계에 유념하면서도 집단적 주민 희생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려는 서술 의도를 드러냈다.

한편 북한은 4·3사건의 전개과정을 크게 무장투쟁의 시각과 탄압·학살의 시각으로 나누어서 서술하고 있다. 무장투쟁의 시각에 따르면, 사건 전개과정을 다시 네 시기로 나누어서 설명한다. 첫번째는 5·10단선을 반대하는 4·3봉기 시기(1948. 4. 3~4. 30)이며, 두번째는 5·10단선을 전후한 반미애국투쟁 시기(1948. 5. 1~6. 30), 세번째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투쟁 시기(1948. 7. 1~9. 30), 네번째는 제주도인민들의 유격투쟁 계속 시기(1948. 10. 1~1950. 5. 30)이다.

탄압과 학살의 시각에서 시기를 구분할 경우 사건 전개과정은 두 시기로 나누어진단. 첫번째는 봉기 직후로부터 대규모 토벌작전이 진행되는 시기(1948. 4. 3~9. 30)이며, 두번째는 학살 만행이 절정에 이르는 시기(1948. 10. 1~1949. 2. 28)이다.

## 1) 무장투쟁의 시각

### ① 무장봉기 시기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무장투쟁의 첫번째 시기는 4월 3일 무장봉기가 일어난 때로부터 한 달 동안에 해당된다. 북한은 4·3봉기를 남한의 단독선거를 저지 파탄시키고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한 남한 인민의 선구적 투쟁으로 평가한다. 4월 3일 일어난 무장봉기는 폭발적인 투쟁도 우연적인 폭동도 아니었다. 8·15 해방 후 새 사회 건설과 나라의 자주적인 통일독립을 위하여 줄기차게 벌려온 제주도 인민들의 정의로운 반미애국투쟁이란 것이다.

4월 3일 새벽 각 면 단위로 편성된 인민자위대는 새벽 2시 총궐기하였다. 무장자위대는 제주도 내 14개 경찰지서, 출장소와 제주·서귀경찰서를 비롯한 경찰·서청의 숙사와 국민회·독촉국민회·대동청년단 등의 집과 행정기관들을 기습 파괴하였으며, 많은 경찰·관공리들을 체포하여 현지 인민재판에서 처단하였다. 이 날 전투에서 경찰지서 2개소를 불태웠으며 경관 11명, 우익단체원

11명, 민간인 10여 명을 처단하였다. 이 첫 봉기에는 500여 명의 인민무장자위대를 선두로 하여 노동자·농민·사무원·어민·해녀·목동들과 학생 등 3,000여 명이 참가하였다고 북한은 주장한다.

이러한 봉기에 대한 미군정의 대응에 대해 북한측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미군정은 4월 5일 즉각 제주도비상경비사령부를 설치하고 국군·경찰·무장우익단체를 비제주도 출신으로 배치하여 지역 감정을 촉발하였고, 잔인한 살육전을 감행하도록 선동하였다. 제주도 출신이 다수 망라되어 있는 9연대를 봉기 발발 즉시 타 지역으로 이동시켰고, 월남한 사람들이 많은 혼성제11연대를 제주에 주둔시켰다. 해안을 봉쇄함과 동시에 계엄령을 선포하여 학살 만행을 감행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사태가 발전하여가자, 4월 15일 무장봉기자 대회가 개최되어 4·3봉기를 총화하고 5·10단선 음모를 결정적으로 분쇄하고 북한의 민주기지 성과에 따라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군사 정치적 대책을 강구했다고 한다. 이어서 인민무장자위대는 인민유격대로 재편성되었다. 인민유격대의 조직은 지휘부가 있고 그 밑에 연대(지대)와 그에 직속하는 소대, 그리고 지휘부 직속의 특공대(정찰 공작)와 특경대(지방 반동의 동향 감시)로 조직되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조직 편성에 대한 서술은 일본에서 간행된 『제주도 인민들의 4·3무장투쟁 자료집』에 의존하였다. 유격대원들은 북로당과 김일성의 영도에 의한 북한에서의 민주개혁의 성과들을 해설 선전했으며, 『혈화』·『인민통신』 등과 같은 혁명적 출판물을 통해 교양 교육을 강화했다. 이어서 4월 27일 국방경비대 제9연대 문상길 중대 100여 명의 군인들이 연대장을 처단했다고 북한은 주장한다.

무장투쟁의 첫번째 시기에 대한 북한의 설명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4월 3일 당일 상황에 대한 설명의 오류를 들 수 있다. 우선 무장대가 습격한 대상 가운데 경찰지서는 14개 지서가 아니라 12개 지서이며, 제주·서귀경찰서에 대한 습격은 없었다. 32명을 죽였다고 했으나, 4·3위원회에서 조사한 사망자는 12명에 불과하다.<sup>18)</sup> 인민무장자위대의 수도 정확하지

18) 『진상조사보고서』, 169-174쪽.

않다. 무장대가 직접 작성한 『제주도 인민유격대 투쟁보고서』에 따르면, 봉기 직전 병력은 유격대 100명, 자위대 200명, 특경대 20명 등 총 320명이며, 4월 3일 당일 지서 습격에는 350명이 동원되었다고 적혀 있다.<sup>19)</sup> 9연대가 타 지역으로 이동하고 혼성 제11연대가 주둔하게 되었다는 것도 1948년 4월 상 황과는 거리가 멀다. 1948년 5월 4일 수원에서 창설된 제11연대는 5월 15일 제주도로 이동하면서 기존의 제주 주둔 9연대를 통합하였다.<sup>20)</sup> 9연대는 11연대에 통합되었다가 7월 15일 다시 부활되어 1948년 12월 말까지 주둔하며 진압작전을 주도하였다. 1948년 11월 17일 비로소 제주지역에 선포된 계엄령을 4월에 선포했다고 한다든지, 1948년 6월 18일 일어난 박진경 대령 암살 사건을 4월 27일로 서술한 것과 같은 오류도 지적된다. 마지막으로 북로당과 김일성의 민주개혁 성과를 무장대가 선전했다는 것은 별다른 근거 없이 북한 정권의 정통성을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의도로 보인다.

## ② 반미애국투쟁 시기

다음으로 무장투쟁의 두번째 시기에 대한 북한의 주장을 살펴보자. 1948년 4월 말 5월 초에 들어서면서 '5·10단선'을 반대하는 제주도 인민들의 항쟁은 결정적인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북한은 보고 있다. 이때의 항쟁은 북한에서 개최된 4월 남북연석회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선거 거부 투쟁에 대응해 토벌공세를 강화한 미군정과 경무부는 3,000명의 국방경비대 병력과 수천 명의 테러단을 동원하였고, 향보단까지 배치했다고 지적하였다. 심지어 대중적 학살과 '초토화작전'을 배합하면서 수많은 부락을 불태워버리는 야수적 만행을 감행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탄압에 맞서 제주도 인민들은 4월 말~5월 초부터는 유격대의 무장투쟁, 대중적 폭동과 시위 등 각종 형태의 투쟁을 결합하여 선거자 등록 거부, 선거자명부 탈취, 선거사무소 습격 파괴, 경찰과 선거관리위원 처단 등의 투쟁을 벌여나갔다고 서술하였다. 이 시기 투쟁에 대한 설명은 남한측 《제주신

19) 『제주도 인민유격대 투쟁보고서』(문창송 편, 『한라산은 알고 있다. 묻혀진 4·3의 진상』, 1995, 11-13쪽).

20) 『진상조사보고서』, 217쪽.

문》 특별취재반의 조사 결과에 의존하였다. 한편 9연대 병사들의 무장투쟁 지원 동향을 설명하면서 9연대장과 무장대 대표 김달삼과의 회담도 언급하였다. 또한 9연대 문상길 중대는 유격대와의 연계를 긴밀히 꾀해 왔는데, 4월 27일 100여 명의 병사들이 중대장의 지휘 밑에 대촌병사의 군기고를 열어 수많은 무기와 군수품을 가지고 나와 대정 등지의 토벌군을 완전히 소탕했다는 것이다.

선거투쟁에 나선 제주도민들의 동향에 대해서는 선거일을 앞두고 약 5만 명의 도민들이 한라산에 올라가 집단적으로 투표 참가를 거부한 것으로 서술하였다. 《로동신문》(1948. 5. 12)을 인용하여, “5월 10일 오전 9시 조천면에서 봉화투쟁이 벌어지고 군중들의 함성시위가 일어났다. 조천-함덕간 도로를 위시하여 각지 도로는 시위군중에 의하여 차단되었다. 함덕에서는 9일 밤부터 밤을 새워 봉화가 올랐는데 이것을 신호로 전 도민이 봉기하였다”고 하였다. 선거의 결과에 대해서는 《로동신문》(1948. 5. 22)의 기사대로 “북제주 134개 투표구 중 투표함을 거둔 것이 겨우 64개, 그 중 62개의 투표함에는 몇 표씩밖에 들어있지 않으며, 2개의 투표함은 빈 통이었다. 남제주에서도 71개의 투표소에는 전혀 투표가 되지 않았다”고 소개하였다. 결국 미군정도 부득이 제주도의 선거 무효를 선언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두번째 시기는 북한이 4·3봉기의 가장 중요한 역사적 성격으로 거론하는 ‘단선거부 통일운동’이 전개된 기간이다. 대체로 북한은 이 시기의 항쟁을 북한이 주도한 4월 남북연석회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4·3봉기를 북한이 지향하는 인민공화국 수립을 위한 제주도민의 의지가 결집된 것으로 무리하게 해석한 결과라고 여겨진다. 제주도의 선거 거부 투쟁에 대해 대중적 학살과 초토화작전을 배합하면서 수많은 부락을 불태워버리는 야수적 만행을 감행했다는 것은 이 시기 미군과 11연대의 진압작전에 비추어볼 때 과도한 서술이라 하겠다. 초토화작전은 주지하다시피 1948년 11월부터 전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미군정의 강력한 진압과 학살을 의도적으로 강조하려는 북한의 4·3사건 인식구도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4월 27일 9연대원의 탈영은 5월 20일 상황의 오기로 보인다. 『제주도 인민유격대 투쟁보고서』에도 4월 27일 상황은 보이지 않고, 5월 20일 문상길 소위

지시에 의해 9연대 최상사 이하 43명이 탈영하여 대정지서를 습격했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이다.<sup>21)</sup> 마지막으로 남제주군에서 선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서술도 사실과는 다르다. 선거 결과 북제주군 2개 선거구는 무효 처리되었지만, 남제주군 선거구는 86.6%의 투표율을 보인 가운데 무소속 오용국이 당선되었기 때문이다.<sup>22)</sup>

### ③ 최고인민회의 준비투쟁 시기

1948년 7월 초부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위한 세번째 투쟁의 시기로 접어들었다. 북한은 이 시기 무장대의 엄호 하에 군·읍·면·리 선거위원들이 곳곳에서 과감한 집회운동, 선거사업, 비밀해설, 빼라운동, 시위투쟁 등을 통해서 유권자 자신들이 서명하게 하였다고 서술하였다. 결국 총 유권자의 85% 이상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 참가하는 빛나는 성과를 거두었다는 것이다. 안세훈·김달삼·고진희·문동용·강규찬·이정숙 등 6명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출되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 참여한 결과를 토대로 북한은 제주도민들이 한라산 창공에 공화국 깃발을 휘날리며 조국 통일을 위한 반미애국항쟁을 더욱 힘차게 벌였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은 제주도 인민들에게 커다란 광명을 안겨준 것으로 인식했다.

이러한 세번째 투쟁 시기와 관련해서는 4·3사건을 바라보는 북한측의 입장이 강하게 드러나 있다고 보여진다. 제주도민들이 4·3봉기에 가담했던 궁극적 취지가 북한 정권의 지지로 귀결되는 것이라는 설명은 자칫 4·3사건을 북한의 의도에 따라 일어난 것으로 그릇되게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 오히려 4·3사건의 전 과정에서 이 시기 무장대 및 남로당 제주도당 지도부가 제주도를 탈출하여 북한으로 간 사실에 대해서는 지도부의 무책임성과 북한정권 지지에 따른 대한민국 정부의 강경 탄압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판 의견이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특히 유권자 자신들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 85%가

21) 문창송 편, 『한라산은 알고 있다. 묻혀진 4·3의 진상』, 81쪽.

22) 『진상조사보고서』, 210쪽.

자발적으로 참가했다고 서술한 것은 당시 상황과는 맞지 않음을 지적하고 싶다. 이는 대부분 무장대의 강요에 의한 ‘백지날인’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가명인 경우도 많았다는 것이다. 또한 제주도민들은 이 선거의 의미를 대부분 몰랐으며, “무장대를 지지한다”는 정도의 의미로만 알아서 백지에 손도장을 찍어주었다는 것이다. 뒷날 이 명부가 문제가 되어 엄청난 인명이 확실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sup>23)</sup>

#### ④ 유격투쟁 재개 시기

무장투쟁의 네 번째 시기는 1948년 10월 여수 14연대의 반란에 영향을 받아 유격투쟁이 재개되어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인 1950년 5월까지 계속 투쟁이 전개되는 기간이다. 북한은 이 시기에 진압군의 탄압 만행으로 유격투쟁이 장기화된 조건하에서 적극적인 방위전을 전개하면서 무장대오를 정비 강화하고 광범한 인민대중을 투쟁 대오에 묶어 세우는 사업을 진행했다고 서술하였다. 제주도 무장대 지휘부는 종래의 연대를 소부대로 재편성하고 유격투쟁을 계속해나가기 위한 작전을 세웠다는 것이다.

1948년 11월 20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미군 장기주둔안을 통과시킨 후 항쟁을 완전 진압하기 위한 또 하나의 책동으로 성벽을 구축하고 전략촌을 만드는 등 강력한 탄압 국면에서 인민무장대는 제주도민들과 긴밀한 연계 밑에 토벌대에게 군사적 타격을 주었다고 서술하였다. 1949년 초 ‘유격대 진멸’을 위한 ‘3월 공세’에 대처하여 대토벌로부터 인민들의 희생을 막기 위하여 무장력을 정예부대로 강화하며 부양가족들과 비전투원들을 부락으로 돌려보내는 한편 부락민과 연계를 강화 발전시키는 등 새 체제를 확립하고 투쟁을 계속했다고 밝혔다. 이 시기에 제주도민들은 항쟁의 무기를 높이 치켜들고 과감한 투쟁을 벌여 봉기한 지 1년 만에 한라산을 중심으로 한 부락들에 해방지구를 만들었다고 하였다. 이 지역들에서는 인민위원회가 회복되었고, 민주개혁이 실시되었으며 정당 사회단체가 활동하였다는 것이다. 이어서 1949년 6월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이 결성되고 북한의 평화적 통일 정책이 제시된 데서 고

23) 『진상조사보고서』, 237-239쪽.

무를 받은 제주도민들은 국토 완정을 위한 투쟁을 계속했다고 서술하였다. 마지막으로 1950년에 들어들면서 미국의 그 앞잡이들의 유격대에 대한 진멸정책이 감행되었으나, 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인민유격대는 대오를 정비하면서 새로운 투쟁을 전개하였다고 정리했다.

한편 유격투쟁 전 시기를 종합하면서 4·3봉기의 규모와 관련하여 제주도 행정당국이 발표한 통계 숫자를 인용했다. 즉, 공비(유격대와 입산한 인민) 출몰 수 7만 3,576명, 인명피해 8만 65명, 관공서 피습 및 소실 228동, 학교 소실 224개, 피해부락 수 160부락, 피해호수 1만 5,228호, 이재호수 3만 5,921동이다.<sup>24)</sup> 이러한 수치에 대해 북한은 축소 발표된 수치로 파악하였으며, 이 자료만 가지고서도 제주도민들이 봉기에서 얼마나 많은 성과를 거두었는가를 알 수 있다고 하였다.

위와 같은 네번째 시기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우선 전체적으로 이 시기는 중산간지대 초토화작전을 통해 무장대와외의 연결선이 끊어졌던 상황이다. 그러므로 광범한 인민대중을 투쟁 대열에 묶어 세우는 사업은 불가능해졌음을 전제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1949년 3월 이후 입산한 인민들을 부락으로 돌려보낸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중산간지대 마을은 소개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들이 부락으로 돌아간 것은 아니었다. 이들은 대부분 군부대와 경찰지사로 귀순하여 대단위 집단수용소에 수감된 가운데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석방되거나 군법회의를 거쳐서 전국 각 지역 형무소에 수감되었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 부락민과 연계를 강화해서 투쟁을 계속했다는 것은 실제 사실과 거리가 있다. 더욱이 봉기한 지 1년 만에 한라산을 중심으로 한 부락들에 해방지구를 만들었다는 것은 당시 상황을 거의 무시한 왜곡된 내용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내용은 1949년 4월 3일자 《로동신문》에 게재된 김영주의 글과 논조가 비슷한 낙관적인 설명으로 보인다.<sup>25)</sup> 다음으로 제주도 행정당국이 발표한 통계 수치를 북한의 의도대로 분석

24) 이 자료는 원래 제주도청에 발간한 《제주도》(1963년 8월호)에 실려 있는 것이다. 이를 수록한 『제주도인민들의 4·3무장투쟁사』, 262쪽에서 재인용한 것이다.

25) 김영주의 글에서는 “지난 1년 동안의 경험은 반동의 학살적 폭압하에서 전개

하고 있음이 파악된다. 남한측이 발표한 ‘공비’를 ‘유격대와 입산한 인민’으로 파악하는 것은 4·3사건을 인민항쟁으로 보는 북한의 시각이 반영된 해석이라고 보여진다. 1948년 겨울에 입산한 주민들은 토벌대의 초토화작전을 피해 산으로 피난한 자들이었다. 이들을 모두 공비로 취급하는 남한측 자료도 문제지만, 유격대와 연계된 입산자로 파악하는 북한측 해석도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8만에 달하는 인명 피해와 엄청난 물질 피해를 봉기의 성과라고 단정하는 것은, 인민항쟁의 성격에만 골몰한 나머지 토벌대에 의한 대량 민간인 학살과 물질 피해가 외면되어 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 2) 탄압·학살의 시각

북한은 4·3사건을 인민무장항쟁 또는 단선거부 무장투쟁의 시각에서 주목한 나머지 민간인 학살의 실상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어왔다. 1965년 발표된 김덕호의 글에서도 무장투쟁만 강조했지, 학살의 실태에 대해서는 외면했다. 특히 그의 글에서는 미군정의 탄압을 서술했지만 1948년 말부터 1949년 초까지 진행된 민간인 학살은 한 줄도 언급되지 않았다.

북한은 4·3사건 발발 이후 몇 년간 《로동신문》에 김달삼과 강문석 등 남로당 관계자들의 발언을 통해 학살 실태를 일부 드러내었다. 1949년 4월 3일 사건 발발 1주년을 맞아 김주영이 쓴 기사에는 “리승만 괴뢰정부는 제주도

---

되는 무력항쟁의 필연성과 정당성을 증명하였다. 제주도 인민무력항쟁부대들은 앞으로 더욱 승리적으로 싸울 것이다. (중략) 또한 공화국 정부 주위에 굳게 뭉친 제주도 인민들은 자기들의 편에 3천만 조선인민이 나서있고 그 선두에는 조선인민이 영웅이며 령도자이며 조선인민을 승리로 인도하시는 김일성 수상이 서계시며 북반부에는 이미 확고불발한 민주기지가 축성되었고 강력한 세계민주력량의 선두에 선 강대한 쏘련이 우리 공화국 편에 서있다는 승리적 조건에 부단히 고무 격려되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제주도 인민들은 해방 후 오늘까지의 피의 항쟁 속에서 단련되고 결속된 남조선로동당을 선두로 한 강대한 민족통일전선을 가지었기 때문이다. 조국과 인민의 영예를 고수하는 제주도 인민들의 영웅적 구국투쟁은 조국의 청사에 빛날 것이며 전체 조선인민들의 장엄한 구국투쟁과 함께 반드시 승리를 쟁취하고야 말 것이다”라고 하여 낙관적인 정세 전망을 하고 있다.

계엄령을 선포하고 무차별 사격에 의한 대량 도살과 방화 파괴 등 악랄한 수단을 다하였다. 그리하여 1만여 명의 인민을 학살하였으며 제주도 총 호수 5만 호 중 그 40%에 해당하는 2만여 호를 불태웠다”고 밝혔다. 또한 1950년 4월 3일 2주년 기념 기사에서는 강문석이 “1949년 봄까지 농들이 전 농가 호수의 40%인 2만 호를 소각하고 1만여 명의 인민을 도살했다”고 위 내용을 반복하고 있다.

《로동신문》 1952년 4월 3일자에는 “미군의 토벌 개시 후 불과 수십일 동안에 제주도 내에서 철모르는 쪼먹이 어린아이들과 소년 소녀들까지도 포함한 무려 4만여 명의 무고한 인민들을 형용할 수 없는 야만적 방법으로 학살하고, 전체 도민의 90% 이상을 체포 고문 투옥하였으며, 도내 4백 개 부락 중 195개 부락의 1만3천여 호에 달하는 인민들의 가옥을 불살라버렸다”고 썼는데, 사실과 동떨어진 내용이 아닐 수 없다. 이후 《로동신문》은 1953년, 1963년, 1965년, 1967년, 1968년, 1973년, 1983년, 1984년 4월 3일자에 각각 4·3사건에 대한 논설 및 관련 기사를 게재하였다. 그러나 이것들 가운데 1965년, 1968년, 1973년 4월 3일자 기사에서 7만 명이 학살되었다고 단순히 소개하는 정도에 그쳤고, 나머지 연도 기사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이러한 학살 사실에 대한 외면은 『조선통사』(1958년판 ; 1983년 개정판)와 『조선전사』 24권(1981)에도 마찬가지로 확인된다.

이러한 시각은 198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 달라졌다. 《로동신문》 1988년 4월 3일자에는 「겨레의 피값을 기어이 받아내야 한다」(전군섭)는 제목하에 4·3사건을 ‘대량 양민학살’로 바라보는 입장으로 전환했고, 1987년 6월 민주항쟁 직후 분위기가 전환된 남한측의 입장도 전달했다. 특히 1948년 가을부터 1949년 봄까지 매일 평균 100여명의 무고한 주민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전했고, 조천읍 북촌리 주민이 몰살당한 참상도 소개했다. 그리고 8·15 후 미국이 남한에서 감행한 가장 큰 대중적 학살만행이었다고 매듭을 지었다. 이러한 기사는 《로동신문》 1993년 4월 3일자 「제주도의 피값을 받아내야 한다」(조해성), 《민주조선》 1998년 4월 3일자 「항쟁용사들이 흘린 피를 헛되게 하지 말아야 한다」(배원숙), 『로동신문』 1998년 4월 7일자 「제주도 학살 만행 진상을 밝히라-제주도민들 4·3봉기 희생자들을 추모」, 《민주조선》 1999년 4월

3일자 「애국적 봉기자들에 대한 대중적 학살 만행」(배원숙), 《민주조선》 2001년 4월 3일자 「미제는 조선인민의 불구대천의 원수-제주도의 한은 반드시 풀어야 한다」(오병치), 《민주조선》 2002년 4월 3일자 「미제침략자들은 조선인민의 철천지 원수다. 천백배의 복수를-제주도의 한을 풀어야 한다」(오병치) 등으로 이어지면서 4·3사건을 '학살 만행 사건'으로 바라보는 입장이 주류를 이루었다. 물론 학살의 책임은 미국에 있다는 전제하에서 설명되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와 같은 시각의 변화가 나타난 원인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우선 북한이 해방공간 시기 남조선 혁명을 지향하는 정세 속에서 학살의 피해 상황보다 인민항쟁의 성과를 강조하는 것이 더 강력한 투쟁을 자극할 수 있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남로당 지도부의 입장에서는 숙청당하기 전 자신들의 업적을 과시하고자 하는 가운데 과도하게 제주도민들의 자발적 항쟁의 모습을 부각시켰을 것이다. 이런 분위기가 1970년대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학살의 내용이 잘 드러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둘째 원인은 1980년대 후반 남한의 민주화 운동의 진전 속에서 남한 쪽의 연구성과와 학살 진상규명운동의 분위기를 북한이 인식한 점에서 찾을 수 있다. 1980년대 후반 이후 작성된 북한의 신문 기사나 논문 등에는 남한 대학생들의 시위 상황, 언론 보도, 관련 논문 등이 부분적이거나 소개되고 있다. 남한에서 강조되었던 인권 유린과 양민학살 사태의 시각이 북한에도 영향을 미친 결과로 보여진다.

이러한 1980년 후반 시각의 변화가 반영된 글이 박설영의 논문이다. 따라서 이 논문을 바탕으로 북한이 탄압·학살의 시각에서 바라본 4·3사건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 ① 대규모 토벌 시기

첫번째 시기는 4·3봉기 직후로부터 9월까지 대규모 토벌작전이 진행되는 기간(1948. 4. 3~9. 30)이다. 북한은 이 시기에 '4·3봉기를 말살하기 위한 미국의 교활한 음모 책동'이 벌어졌다고 보며, 첫 시기부터 미군정이 4·3 초토화작전을 직접 지휘하였다고 단정하였다. 4·3봉기가 일어나자 미군정은 1

단계 조치로 1,700명의 본토 경찰 병력을 제주도로 이동시키면서 경찰 작전으로 사태를 해결하려 했지만 실패하자, 미군정 지휘부에서 직접 제주도를 방문하여 적극적인 대책을 세웠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미군정의 동향에 대해서는 《사회와 사상》 1990년 1월호, 미국동군사령부 5월 13일자 정부요약보고서, 김익철의 유고 『4·3의 진실』, 장창국의 『육사졸업생』, 9연대 정보주임 이윤락의 증언 등 남한측 자료들이 근거로 제시되었다.

특히 이 시기에 계속 이어진 경비대와 경찰과의 충돌, 4월 28일 9연대장과 무장대측과의 협상, 5월 1일 오라리 방화사건 조작, 5월 5일 9연대장 김익철과 경무부장 조병옥과의 충돌 등을 남한 자료를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북한은 이러한 일련의 미군정의 의도를 제주도 인민항쟁을 탄압·말살하려는 '초토화작전'으로 내몰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인식했다. 강경과 브라운을 사령관으로 파견하여 진압작전을 지휘 통솔하게 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했다. 《조선일보》 1948년 6월 6일자에 게재된 "미군정당국은 상공에는 미군정찰기가 날고 제1선에는 전투를 지휘하는 미군의 잠이 질주하고 있으며 해양에는 근해를 경계하는 미군함의 검은 연기가 그칠 사이 없이 휘날리면서 경비대와 경찰을 동원하고 있다"는 기사를 제시하며 미제침략자들이 제주도인민의 반미구국투쟁을 탄압하고 인민을 학살한 장본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시기에 북한은 미국이 제주도를 빨치산 토벌작전의 시험장으로 선택하고 진멸정책을 실시하여 온 섬을 불바다, 피바다 속에 잠기게 하였다고 주장했다. 4·3무장봉기가 개시되자 계엄령을 선포하였고, 잔인한 방법으로 인민들을 닥치는 대로 투옥 학살하였다는 것이다. 이어 1948년 5월 중순부터 대규모 토벌작전이 진행되어 엄청난 파괴와 살육 만행이 감행되었는데, 각 지역별 사례를 다음과 같이 거론하고 있다. 5월 중순 한림면 상명리에서 20여 명 주민 학살, 하귀리에서 200여 명의 주민학살을 들고 있다. 6월 들어 토벌대는 '燒盡', '殺盡', '奪盡' 등 대중적 학살과 약탈, 초토화작전을 결합시킨 이른바 '6·10 대토벌' 공세를 감행하기 시작하여 도처에서 닥치는 대로 민가를 불사르고 무고한 주민들을 학살하였다고 주장했다. 7월에도 학살은 계속되어 애월리 주민 80여 명을 비행장에서 총살했으며, 같은 시기 산지향에서는 15명의 주민을 총살한 뒤 바다에 던졌다는 것이다.

이상이 첫번째 시기 미군정의 탄압과 학살에 대한 서술의 대강이다. 첫 시기에 대한 북한의 서술 중에서 미군정의 진압 의도를 분석한 내용은 진상에 근접한 남한측의 조사 성과 및 자료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남한측 보고서와 일치된다. 그러면서도 북한은 미국의 개입과 초토화작전 음모를 두드러지게 강조함으로써 다가올 민간인학살의 책임이 미국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음이 확인된다.

그 연장선상에서 민간인 학살에 대해서는 좀더 세밀한 검증이 필요하다. 계엄령 선포 날짜는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1948년 11월 17일이므로 봉기 발발 직후라는 것은 잘못이다. 1948년 10월 이전에 대규모 대중적 학살이 있었다는 것도 실제 사실과는 거리가 먼 왜곡된 서술이라 하겠다. ‘6·10 대토벌’은 11연대장 박진경이 지휘한 진압 작전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데, 작전 결과에 대해서 미군보고서는 “11연대는 6주간의 제주도 작전에서 약 4,000명을 체포하여 심문 끝에 약 500명을 구속했다. 작전 중 사망자는 경비대원 3명이었다”고 하여 민간인 사망자 수는 확인되지 않는다.<sup>26)</sup> 위에서 예시한 상명리·하귀리의 경우 경찰과 우익단체원들이 주민들을 학살한 사례가 확인되는데, 상명리에서 10여 명, 하귀리에서 10여 명이 총살된 것으로 확인된다.<sup>27)</sup> 애월리 주민 학살 사례는 그 증거를 찾아보기 힘들다. 4·3봉기 직후부터 시종일관 대량 민간인 학살이 이루어진 것으로 단순히 설명하는 것은 실제 1948년 겨울에 집중된 학살의 실상을 회색시켜 버리는 문제점을 초래한다.

## ② 학살만행 절정 시기

탄압·학살의 두번째 시기는 학살 만행이 절정에 달했던 기간(1948. 10. 1 ~ 1949. 2. 28)이다. 북한은 여수 주둔 14연대의 폭동 이후 학살 만행이 절정에 달했다고 하였다. 10월 하순부터 전개된 각 지역별 학살 사례를 소개하고, 의귀리·수망리·한남리 등 중산간 지역을 모두 불태웠다고 하였다. 12월에 접

26) 『진상조사보고서』, 220쪽.

27) 《제민일보》 1998년 6월 26일자 「4·3은 말한다, 상명리편」 ; 1999년 3월 12일자 「하귀리편」.

어들어 살인 만행은 더욱 대규모적으로 이루어진 결과, 수많은 주민이 학살되고 200여 개의 부락이 소각된 것으로 주장했다. 1949년 2월 초에 있었던 남원면 남원·위미·의귀리 등에서의 400여 명 대학살, 조천면 북촌리에서의 대규모 학살 등을 명기하였다. 일본에서 간행된 『제주도인민들의 4·3무장투쟁사』를 인용하여 1948년부터 1950년 사이에 총 인구의 25%인 7만여 명이 학살당한 것으로 규정했다. 이러한 학살 만행에 대해서는 남한의 역사가들까지도 인정하는 바라고 하면서, 《한국일보》 1988년 4월 6일자 “4·3항쟁 기간 중 젊은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빨갱이로 몰려죽은 사람이 부지기수이며 해안에서 4킬로 이내 지역은 초도화된 것은 물론이고 도벌대가 휩쓸고 간 오라리·도두리·토산리·북촌리 등은 생존자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철저하게 파괴되었다”는 기사를 인용하였다.

1988년 4월 3일자 《로동신문》은 두번째 시기 학살의 실상을 다음과 같이 전했다.

방화·초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삼광작전’, 불태우고 죽이고 굶겨 없애는 ‘삼진작전’, 집단학살을 위한 토끼몰이식 ‘투망살육작전’, 유격대와 주민들과의 연계를 차단하기 위한 ‘축성작전’ 등 탄압 살육작전이 전개되었다. “전 섬에 휘발유를 붓고 빨갱이는 모두 죽여도 좋다” 이것이 당시 미제가 내린 살육지령이었다.

미제의 야수적인 인간살육 만행으로 4·3봉기를 전후하여 수많은 애국적 인민들이 집단학살되었으며, 1948년 가을부터 1949년 봄까지 사이에만도 매일 평균 100여 명의 무고한 주민들이 목숨을 잃었다.

남제주군 남원읍 수망리와 북제주군 조천읍 북촌리에서는 전 주민이 몰살당하는 참상까지 빚어졌다. 지어 미제는 토벌작전에 내몬 살인 무리들 사이에 “업적을 위한 살육 경쟁”까지 붙임으로써 놈들이 살육으로 더욱 미쳐 날뛰게 하였다.

남조선의 한 신문은 지금도 “제주사람들은 ‘4·3’ 이야기만 꺼내면 무슨 되살리기 싫은 악몽처럼 진저리를 친다”고 전하였다.

미제는 2년 남짓한 기간에 감행한 인간살육작전에 연 100만 명의 병력을 동원하였으며 제주도 인민의 1/4에 해당하는 7만여 명을 학살하였다.

학살의 근본 책임을 일관되게 미국에 묻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1948년 가을 이후의 집단학살을 좀더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남한의 신문 기사도 인용하고 있다. 즉, 남한에서 제기된 민간인 학살 사태로서 4·3사건의 진상규명 움직임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이 시기에 대한 북한의 설명과 남한 정부의 보고서를 비교해 보면 4·3사건을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발견된다. 우선 북한은 제주도민의 정당한 무장봉기에 대해 미국이 강력하게 탄압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학살이 빚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남한 정부의 보고서는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무장봉기한 이래 무장대와 토벌대간의 무력충돌과 토벌대의 진압 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규정하였다.<sup>28)</sup> 즉, 북한이 4·3사건을 인민항쟁으로 규정하고 이를 진압한 주체를 미국으로 보면서 학살 문제를 다룬 반면, 남한은 이 사건을 남로당 제주도당의 봉기로 한정하고 제주도 주민들이 국가공권력의 진압 과정에서 희생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므로 북한은 1948년 가을 이후 학살을 부각시킨 1980년대 후반 이후에도 ‘인민항쟁에 대한 미국의 탄압과 학살’이라는 인식의 줄기를 놓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학살을 강조하면서 인민항쟁론을 더욱 뚜렷이 했다는 느낌이다. 남한에서 인권 유린의 문제로 4·3사건 진상에 접근하여 민간인 학살을 드러낸 것과는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1948년 가을 이후 학살에 대해서도 남한의 보고서가 상당한 비중을 두었던 반면, 북한측은 미국의 책임을 거론하는데 필요한 정도의 근거로 활용했다고 할 수 있다.

#### 4. 4·3사건의 성격과 의의

북한은 4·3사건을 남한만의 단독선거를 저지 파탄시키기 위해 제주도민들이 일으킨 적극적인 무장봉기로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4·3사건의 성격을 거론하면서 발생 원인과 결부시켜 이해하고 있다. 기본적인 발생 원인은 미국과 이승만 정권의 식민지 예측화 정책과 반인민적 통치, 폭압 통치에 있다고 보

28) 『진상조사보고서』, 536쪽.

았다. 제주도민이 조선시대 말기부터 겪어야 했던 역사적 경험과 해방 당시 제주도의 정치적 상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고, 미군정의 그릇된 지방통치와 경찰, 서북청년회의 전율적인 폭압이 그 화근이었다는 점도 거론되었다. 더불어 북한은 해방 후 북한에서 이룩된 민주건설의 성과가 제주도민들에게 커다란 희망과 고무를 주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4·3봉기의 직접적 동기에 대해서는 미군정 시기 경찰이 1947년 3·1절을 경축하는 제주도민들을 학살하고 부상시킨 사건을 들었다. 이러한 경찰의 만행 때문에 제주도민 전체가 참을 수 없는 민족적 격분을 일으켜 봉기를 촉발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결국 제주도민들의 4·3봉기는 남한에 대한 미국의 식민지예속화 정책과 민족분열 책동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적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반미애국항쟁이었으며 이승만 정권의 반인민적 통치를 반대한 반파쇼 민족해방투쟁이었다고 성격을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4·3사건의 이러한 성격으로부터 사건의 특징 몇 가지를 찾아볼 수 있다고 했다. 첫째, 4·3봉기는 유격투쟁을 기본으로 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형태의 투쟁이 결합된 적극적이고 과감한 애국투쟁이었다는 것이다. 제주도 인민들은 무장유격투쟁을 기본으로 하면서 여기에 정치과업, 동맹휴학, 탄압과 약탈을 반대하는 항의집회와 시위 등 다양한 형식의 투쟁을 밀접히 배합하였다.

둘째, 전체 도민 30만 명 중 24만 명이 꺾기한 대중적이고 전도민적인 항쟁이라는 것이다. 봉기에는 노동자·농민·사무원·상인·어민들과 해녀들, 목동과 학생들이 참가했으며, 노인들과 어린 소년들까지 총궐기했다.

셋째, 제주도 인민들이 자주적 원칙에 철저히 서서 자체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면서 투쟁을 성과적으로 벌려나갔다는 것이다. 육지와 떨어진 외진 섬에서 그 어떤 외부의 지원도 바라지 않고 자체의 힘으로 항쟁을 조직하고 투쟁방법을 택하여 싸움을 벌렸다. 자체로 인민유격대를 조직하고 유격근거지를 설치했으며 투쟁에 필요한 모든 것을 자기 힘으로 해결하였다. 인민들은 적들의 무기를 빼앗아 자체를 무장하고 점차 장비를 강화하여 적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고 지적했다.

넷째, 봉기가 매우 간고하고 치열한 성격을 띠었으며 장기적인 결사전이었

다는 것이다. 역사상 유례 없는 대학살과 초토화작전이 감행되는 등 간고한 조건에서 토벌대의 온갖 만행에도 굴하지 않고 장기적인 결사전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장기적인 유격투쟁이 가능했던 이유를 제주도민들의 공통적인 처지와 향토애와 애국심에서 찾았다. 즉 제주도민들은 역사적으로 ‘섬땅’, ‘섬사람’이라 하여 온갖 천대와 멸시를 받았으며 정배시의 주민이라는 데서 또한 심한 감시와 압박을 받았다. 이로부터 제주도민들에게는 역사적으로 버림받아 온 사람들이라는 감정이 골수에 사무쳐있었다. 때문에 서로 돕고 단결하는 기풍과 의리감이 강하였으며, 그 어느 때나 외래침략자들과 착취자, 압박자들을 반대하여 한결같이 일어나 용감히 싸우곤 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항쟁에도 불구하고 4·3봉기가 실패한 원인에 대해서 북한은 미국과 이승만 정권의 야수적 탄압, 학살 만행과 함께 투쟁지도부에 개입한 간첩종파 분자들의 파괴 책동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간첩종파도당은 자기들의 반당적이며 반혁명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항쟁이 정확한 투쟁 노선과 방침에 따라 진행되는 것을 반대하고 제주도에 대한 지원을 의식적으로 게을리 했으며 유격대 지휘부 내에 잠입시킨 자기 추종분자들을 사주하여 대열 내의 사상적 통일을 파괴하고 계속 모험적 공세으로 내몰게 함으로써 당 조직을 노출시켰고 수만 명의 희생자를 내게 하였다고 지적했다.

여기서 거론된 간첩종파도당은 박헌영·이승엽 등 한국전쟁 정전 직후 반종파투쟁 과정에서 몰락한 남로당 지도부를 지칭한다. 이승엽 등 남로당 계열의 핵심 인물 12명이 재판에 회부된 1953년 8월 이전까지만 해도 각종 신문이나 기관지를 통해 4·3봉기 과정에서 남로당이 지도한 역할을 정당하게 기술했다. 《로동신문》 1949년 4월 3일자(김영주)에는 “제주도 인민들은 해방 후 오늘날까지의 괴의 항쟁 속에서 단련되고 결속된 남조선로동당을 선두로 한 강대한 민족통일전선을 가졌기 때문이다”고 하였고, 1950년 4월 3일자 『로동신문』에는 남로당 핵심 간부 강문석이 “유격대는 김달삼·이덕구 동무와 같은 진정한 인민의 아들 딸들로 조직되고 또 인민무장항쟁의 선두에는 조국의 통일 독립과 민주화를 위한 투쟁에서 남조선 민주진영의 중심체인 남조선로동당 제주도당 단체가 서 있었으며”라고 하여, 4·3봉기의 중심에 남로당이 있었음을 분명히 하였다. 1950년 4월 3일자 《로동신문》에는 남로당 제주도당

조천면 책임자 조규창이 쓴 “제주도 빨치산들에게 영광을 드린다”는 봉기 2주년 기념시도 게재되어 있다. 남로당의 역할을 적시한 글은 이후 1951년부터 1953년까지 매년 4월 3일 『로동신문』에 빠짐없이 실렸다.

그러나 남로당 핵심 인물에 대한 재판이 치러진 다음해인 1954년과 1955년 4월 3일자 《로동신문》에는 4·3사건에 대한 논평이 빠졌다. 그리고 1955년 12월 박헌영에 대한 재판이 열려 사형이 선고된 직후인 1956년부터 다시 4·3사건 관련 논평이 나왔으나, 남로당에 대한 평가는 달라졌다. 『로동신문』 1956년 4월 2일자 논평(김병선)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투쟁에 결기한 인민들의 영웅적이고 헌신적인 투쟁에도 불구하고 남조선 인민들의 다른 모든 투쟁과 마찬가지로 당시 남로당 지도부에 잠입한 미제의 고용 간첩 박헌영 이승엽 도당들의 파괴 책동으로 말미암아 웅당히 거둘 수 있는 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박헌영 이승엽 간첩 도당들은 남조선에서 혁명 역량을 파괴 말살하기 위하여 혁명의 역량과 객관적 형편과 주관적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혁명에 아무런 이익도 줄 수 없는 그러한 시기를 골라가면서 시위 파업들을 제멋대로 조직하여 수많은 애국자들을 적에게 검거 투옥 학살당하게 하였다.

인민 대중의 애국적 봉기가 있을 때에는 그들의 혁명적 역량을 오히려 결속하여 투쟁을 조직 지도할 대신에 혁명역량을 고의적으로 분산시키며 투쟁의 유기적 연계를 끊어놓아 이를 고립시키며 비조직적으로 혼란을 야기시킴으로써 원수들이 혁명세력을 쉽게 각개 격파할 수 있게 하였다.

간첩 도당들은 제주도 인민들의 대중적 봉기가 일어났을 때 고의적으로 이 투쟁을 고립무원한 상태에 빠지게 하여 결국 인민들의 투쟁 역량을 약화시켰다. 조선 인민은 우리의 혁명투쟁, 특히 남조선 인민들의 혁명적 투쟁에 준 박헌영 이승엽 반역도당들의 반인민적 죄악을 영원히 저주할 것이다. 이를 교훈으로 삼아 혁명적 경각심을 더욱 제고할 것이다.

즉 남로당 지도부 전략 전술의 오류로 인해 4·3봉기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민간인 학살을 불러온 책임도 이들에게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4·3봉기에서의 남로당에 대한 비판적 평가는 『조선통사』(1958 ; 1983)와 『조선전사』 24권(1981)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이상과 같이 봉기의 성격과 한계를 지적하고 있는 북한은 4·3사건의 역사적 의의에 대해서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첫째, 이 봉기를 통해 남한에서 5·10단선을 파탄시킨 첫 모범을 창조했고, 둘째, 남한 인민들의 대중적인 반미애국투쟁을 크게 고무시켰고, 셋째, 미국과 이승만 정권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었으며 인민들의 애국심과 투지를 시위했다는 것이다. 결국 제주도 인민봉기는 광범한 대중 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과 연계를 강화하고 군중을 옹호 조직 동원하여 올바른 투쟁방법과 전략전술을 가지고 과감히 싸운 경험과 역사적 교훈을 남한인민운동사에 남겨놓았다고 평가했다.

북한이 규정하는 4·3사건의 성격과 역사적 의의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북한은 4·3사건에 대해 상당히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4·3봉기는 제주도민 전체층적인 인민항쟁으로서 남한 단독선거를 거부하고 미국의 연속화 정책을 반대한 민족해방투쟁으로 규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북한의 민주기치론에 입각한 통일 방식의 틀에서 4·3사건을 바라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제주도에서의 인민위원회의 활동, 항쟁 시기의 인공기 제양·인공가 제창, 5·10 선거 거부 등의 사례를 단순히 남한 정권의 거부나 북조선 정권의 지지로 파악하는 태도로서는 4·3사건의 진실을 파악하기 어렵다. 제주 민중의 지향점은 주변부에 처해 있는 독자적인 단위로서의 제주도에 미쳐진 세계냉전체제, 한반도 중앙권력의 물리력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데 두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국가주의적 이념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 과거 독립된 단위로서 자율성을 나름대로 추구하던 섬 공동체에 가해진 외부로부터의 압박은 자연스레 섬사람들을 하나로 뭉치게 하였을 것이며, 이때 이들을 조직해낸 것은 지도부의 사회주의 이념이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제주도 남로당의 사회주의 이념은 섬사람들을 조직화시킨 사상적 외피에 불과하다. 즉 4·3사건이 기본적으로 국가폭력에 대한 자기방어적 성격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이며, 미군정과 경찰·서북청년회의 탄압에 저항한 평화적 민중항쟁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은 전계층적 인민항쟁이라는 면을 과도하게 부각시킨 반면, 1954년 이후 항쟁 지도부인 무장대 및 남로당을 비판하고 있다. 이는 반종파투쟁 과정에서 배제된 남로당의 4·3사건과의 연계를 차단하고자 하는 북한 정권의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서술이라 하겠다. 결국 북한은 4·3사건을 지도부에 대한 언급 없이 인민봉기라는 측면에서 접근함으로써, 대중운동을 지도와 대중의 결합이란 틀에서 설명하는 주체사관의 입장까지 어긋난 4·3사건 서술이 되어 버렸다. 이런 모순점을 해결하고자 4·3사건을 북한의 민주개혁의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든지, 김일성의 어록 내용을 인용하면서 (북로)당과 수령의 호소를 받들어 제주도민들이 투쟁에 나섰다고 서술했지만, 이는 전혀 사실과 어긋난 주장임을 알 수 있다.

## 5. 맺음말

이상으로 북한의 제주4·3사건에 대한 인식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크게 보아 북한은 4·3사건을 5·10단선을 반대한 제주도 인민의 무장봉기, 5·10단선 후 북한정권으로의 통일적 중앙정부 수립을 위한 유격투쟁으로 보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4·3사건 인식은 그들 나름의 인민민주주의 혁명론과 주체적인 입장에서 일관되게 정리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의 4·3사건에 대한 인식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앞에서도 자주 지적했듯이, 실증적인 면에서 세부적인 사실을 서술함에 있어서 진상과 동떨어진 내용이 많이 발견된다. 또한 인민항쟁과 미국의 탄압이라는 단순 구도 속에서 각 시기별 특성과 변화 양상이 잘 드러나지 않는 점도 지적된다. 미국과의 대립구도를 강하게 설정한 나머지 제주민중의 생활상, 민간인 학살의 다양한 실상이 규명되지 않았다. 1980년대 후반으로부터 남한에서 출간된 자료를 적극 인용하면서 실증성과 객관성 확보에 주력하는 인상이지만, 진상에 근접한 북한측의 서술은 좀더 시간을 기다려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2003년 10월 15일 대한민국 정부는 4·3사건진상조사보고서를 확정했다. 보고서는 4·3사건을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경찰·서청의 탄압에 대한 저항과 단선·단정 반대를 기치로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무장봉기한 이래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지역

이 전면 개방될 때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장대와 토벌대간의 무력충돌과 토벌대의 진압 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정의했다. 이러한 결론을 근거로 노무현 대통령은 과거 공권력의 인권 유린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이 시점에서 북한은 남한 정부의 보고서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로동신문》 2003년 10월 23일자에는 “미국은 남조선에서 저들이 감행한 인민대학살 만행의 진상이 밝혀지는 것을 몹시 꺼려하고 있다. 남조선에서 반미감정이 더 크게 폭발하는 것을 바라지 않으며 남조선을 계속 군사적으로 가로타고 앉아 지배하려는 목적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결국 4·3 사건과 관련한 남조선 정부 보고서에 사건의 장본인인 미제침략군의 죄악에 대해 전혀 언급되지 않은 것은 미국의 검은 추수가 뻗었기 때문이라고밖에 달리 볼 수 없다. 미국과의 종속적인 관계가 이런 사태를 빚어내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4·3사건에 대한 남북한의 인식은 아직도 서로 평행선을 달리는 차이점을 확연히 드러내고 있다. 물론 민간인 학살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사건의 핵심을 보자는 면에서는 공통분모가 생겼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학살의 원인과 배경을 추적하다 보면 다시 원점에서 팽팽한 대립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남북한이 분단되어 있는 한 분단체제가 고정화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4·3사건에 대한 인식도 분단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다.

[원고접수일: 8월 4일, 심사완료일: 9월 11일]

주제어: 제주4·3사건, 5·10단독선거, 6·25한국전쟁, 남로당, 4·3특별법

Republic of Korea'. The prototype of the differences in the political system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was found in the differences of Bae Seong-Ryong and Ahn Kwang-Chun also.

**Keywords:** the first and second Korea Communist Party, Tuesday Group, Seoul Group, ML Group, Revolutionary People's Republic

## North Korea's Recognition on Jeju 4·3 Incident

Park, Chan-sik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recognition of North Korea on Jeju 4·3 incident and how this recognition affects to interpretation of the nature of 4·3 incident. And, this study is also concentrated on the background, the process, the meaning and character of 4·3 incident.

North Korea views 4·3 incident as armed uprising of Jeju islanders against so-called 'May 10th separate election' for establishing the South Korea government. They also regard this incident as guerrilla warfare for establishing the unified government in favor of North Korea government. These recognition of North Korea on 4·3 incident are consistently presented in the people's democratic revolution theory in favor of independent perspective by North Korea.

But, these recognition has raised some issues. First, there are some mistakes on writing the facts. Second, they do not reveal the process of the development, character and changes of the each period during the incident. Third, they fail to reveal the various facts of mass killings of unarmed civilians. In the end, I think we need more time to analyze the North

Korea's recognition on the facts.

October 15, 2003, South Korea government issued the Investigation Report on Jeju 4·3 Incident. This report defined the 4·3 uprising as “the incident brought up many victims during the armed conflict between security forces and guerrillas, and the suppression campaign by the security forces.”

President Roh Moo-Hyun formally apologized to Jeju islanders about the abuse of human rights conducted by the past government. This is the great leap for the development of our society.

But, North Korea criticizes the Report by South Korea government, asserting the Report has a lot of problems. The recogni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has got a great gap. So, we are living in the different recognition about Jeju 4·3 incident occurred during the process of the fixations of divided governments.

**Keywords:** Jeju 4·3 incident, May 10th separate election, South Korea government, North Korea government, Report on Jeju 4·3 Incident